

# ‘민영화 사장’ 낙하산 일단 저지, 그럼에도 방심하지 말고 파업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국토부가 철도공사 임원 추천위원들에게 외압을 가한 사실이 폭로되자, 항의가 급속히 확산돼 결국 정부는 철도공사 사장 선임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수서발KTX 법인 설립을 서두르기 위해 철도공사 ‘민영화 사장’ 선임을 밀어붙이려던 박근혜 정부가 반발에 밀려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것은 철도노조를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들이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을 벌여 온 성과다.

철도 민영화 반대 여론은 국민 10명 중 7명이 반대할 정도로 광범하다. 수만 명이 모인 8월 17일 촛불집회에선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을 지지해 달라’는 철도노조 위원장의 호소가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민영화 반대 여론이 확산된 결과로 민주당도 당내에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박근혜는 안 그래도 심각한 정치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이런 광범한 철도 민영화 반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국정원 정국이라는 정치 위기 속에서 ‘민영화 사장’ 낙하산까지 강행했다가 부패 정권에 대한 불만이 증폭될까 봐 우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철도공사 사장 재공모는 철도 민영화의 일시적 지연이다.

철도공사 사장 재공모를 발표한 이틀 후,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철도공사에 공문을 보내 사장 공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길어야 한두 달 정도 기간을 지연한 것일 테고, 재공모 절차를 밟아도 또 다른 민영화 추진 사장을 낙점하려 할 것이다.

게다가 이미 철도의 곳곳에서 인력 구



8월 24일 열린 철도민영화저지 2차 범국민대회

조조정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봐야 한다.

1인 승무 확대, 강제 전보, 외주화 등 인력 감축과 노동강도 강화를 위한 공격은 철도 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이며, 민영화 추진 때 전 단계로 반드시 수반되는 과정이다. 이런 조치들은 분할 민영화를 쉽게 하는 데 필요한 절차다.

정부는 철도시설공단의 유사기업 사업별 통합 등을 통한 대규모 예산 절감을 ‘공기업 예산절감의 바로미터’로 삼아 철도공사에 더 한층 강력한 구조조정을 압박할 것이다.

## 경계

따라서 ‘민영화 사장’ 낙하산을 일단 저지했지만 결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정부는 잠시 한 발 옆으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금세 전열을 재정비하고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 수서발KTX 법인 설립을 밀어붙이려 할 것이다.

신흥국 외환위기 확산이 우려되는 현 상황만 봐도, 해외 자본의 신뢰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박근혜 정부는 결코 민영화 계획을 취소하거나 무한정 미뤄두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지금 박근혜는 깊어가는 정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반격에 나서고 있다. 내란죄라는 부풀리기 공작으로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공안탄압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박근혜는 이를 통해 촛불을 잠재우고 철도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기회로 삼으려 할 것이다. 박근혜는 10대 그룹 총수들과 만나 기업 규제 완화 등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도 했다.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9월 법인 설립을 예상하고 준비한 파업 일정을 연기했는지라도 결코 방심하거나 무장해제 돼서는 안 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들이 경계

를 누그러뜨리고 있을 때, 국민 여론을 의식해 파업 돌입을 꺼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허를 찌르며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비록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이를 경계하며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치사한 뒷통수 치기는 저들이 애용하는 수법이다. 1997년 1월 파업도 당시 김영삼 정부가 연말인 12월 26일 노동자들의 경계가 흐트러진 시기에 기습적으로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데서 비롯한 것이다.

철도노조는 만에 하나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수서발KTX 법인 설립 등 실질적 공격을 한다면, 주저 없이 파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체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추석 시기 파업도 불사할 정도로 과감하고 단호한 태세를 갖추고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

KTX범대위와 전국의 여러 지역대책위들도 연대를 지속하며 함께 싸울 태세를 계속 갖춰나가야 한다.

# 구조조정과 민영화에 맞선 투쟁은 하나다

철도공사는 민영화를 앞두고 구조조정에 혈안이 돼 있다.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불만과 저항도 확산되고 있다.

열차 승무 노동자들은 강제 순환 전보에 맞서, 전기 노동자들은 장비운전 업무 외주화 시도에 반대해 투쟁의 시동을 걸었다.

두 직종 노동자는 각각 전국 집회를 열어 자신들을 쥐어짜려는 철도공사에 분통을 터뜨리고 투쟁 결의를 다졌다. 열차 노동자들이 전국 집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비번자들이 전원 참가했다. 전기 노동자들도 6백 명이나 참가해 열기를 보여 줬다.

철도공사가 민영화의 서곡으로 고용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지금, 이를 저지하고 철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용 구조조정은 철도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이므로,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투쟁은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과 하나다.

역사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한 정부들은 대부분 민영화를 앞두고 매각 가치를 높이고자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대량 감원, 외주화, 근무 유연화 등이 그 방법으로 사용됐다. 독일 철도 역시 민영화를 위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력을 절반으로 줄였다.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투쟁 속에서 현장 노동자들이 조직력과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 투쟁은 민영화 반대 파업을 앞두고 중요한 전투가 아닐 수 없다.

## 민영화의 서곡

지난 7월 기관사 노동자들은 1인 승무제 확대 시도에 맞서 싸워 1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두고 자신감을 크게 얻었다. 이런 승리가 열차와 전기 쪽으로도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현재 직종별로 벌어지는 투쟁

이 더 확대되고 다른 직종 노동자들도 함께 싸워야 한다.

각 직종별 대응을 넘어 철도노조 전체가 구조조정 문제에 맞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

최근 기관사 노동자들이 열차 승무 노동자들의 휴일근무 거부 투쟁을 지지하며 대체근로 투입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것은 좋은 출발이다.

또, KTX민영화저지범대위를 비롯해 지역·권역 대책위들이 철도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저지 투쟁에 연대하는 것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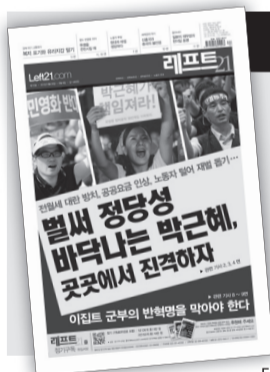
요하다. 이미 KTX민영화저지범대위와 몇몇 지역대책위가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성명서 발표를 결정했다.

앞에서도 강조했다듯이 고용 구조조정은 민영화와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민영화 반대는 '전국민적' 투쟁이고 구조조정 반대는 '경제적' 투쟁이라며 분리해 대응해서는 안 된다.

기관사 1인승무 확대 저지 투쟁에서 철도 민영화 반대 지역대책위의 연대가 기관사 노동자들의 투쟁에 큰 힘이 된 것은 좋은 본보기다.

나누고 싶은 투쟁 소식과 의견이 있다면 연락 주세요.

전화: 02-2271-2395,  
010-8908-7912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 연락처를 보내 주시면 <레프트21>의 철도 민영화 투쟁 관련 기사를 보내 드립니다.



## 노동자와 촛불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동자연대다함께의 선명 진보 신문

국제주의·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노동자 연대

레프트21을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http://www.left21.com>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left21@left21.com | 웹사이트에서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 추천 소책자

※ 20권 이상 구입시 20퍼센트 할인해 드립니다.



박설 이정원 외 지음  
노동자연대다함께  
3,500원

구입 문의  
02)2271-2395,  
010-8908-7912

### 철도 민영화 반대 시리즈 2

## 《철도 민영화: 재앙을 향한 탈선 - 어떻게 막아 낼 것인가?》

목차

1. 철도 민영화로 치닫는 박근혜 정부  
분할 민영화를 서두르는 까닭/ 철도 민영화 추진과 저항의 역사
2. 철도 분할 민영화의 거짓과 진실
3. 탈선 끝에 기다리는 재앙  
'죽음의 기업' KT/ 영국 철도/ 독일 철도/ 일본 철도/ 아르헨티나 철도
4. 답은 다른 곳에 있다  
철도공사화 이후: 시장화가 뜻하는 것 / 민영화 아닌 대안은 있다
5.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투쟁의 정치적 방향과 과제: 파업과 사회적 연대/  
효과적인 파업을 위하여

## 추천사

박흥수(철도노조 정책팀장,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 객원 연구위원)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만든 철도 민영화 반대 시리즈 2탄 《철도 민영화 - 재앙을 향한 탈선》이라는 작은 책자를 보면서 느낀 것은 고마움이었다. 그 동안 다함께는 철도 민영화 문제에 대해 철도 노동자들만큼 관심을 갖고 싸워 왔다. 말이 아닌 몸으로 움직이는 연대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 주는 표본이 아닐까? 붉은 색의 작은 책자는 노동자와 시민들이 철도 민영화가 가져올 문제들에 대해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철도 민영화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봐도 다함께의 책자는 상당한 내용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만큼 심도 있게 철도 민영화 문제에 대응해 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리라. 이 작은 책이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많은 분들에게 소중한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

염길용(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

《철도민영화 재앙을 향한 탈선》 시리즈2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에 대해 꼼꼼하게 분석하고 대응과 방향까지 제시하며, 철도 노동자들의 뭉까지 다하고 있으니 놀랄 일이지. 이제 남은 것은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입니다. 꼭 승리하여 보답하겠습니다.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다면 필독하기를 권합니다.